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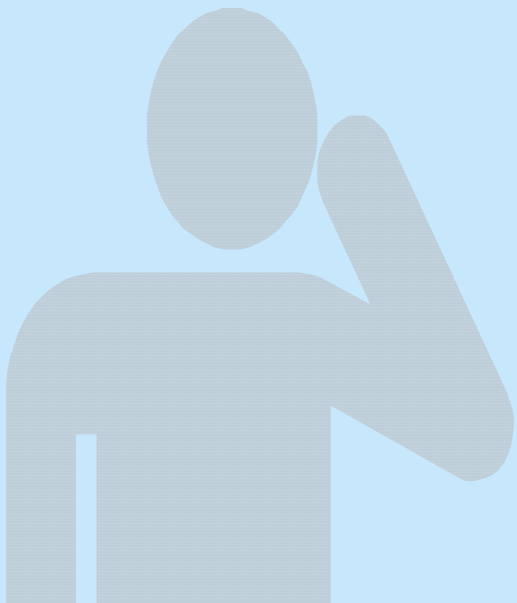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3. 신고사례와 처리 시 유의사항
4. 신고자 보호제도
5. 신고자 보상제도

1. 부패 ·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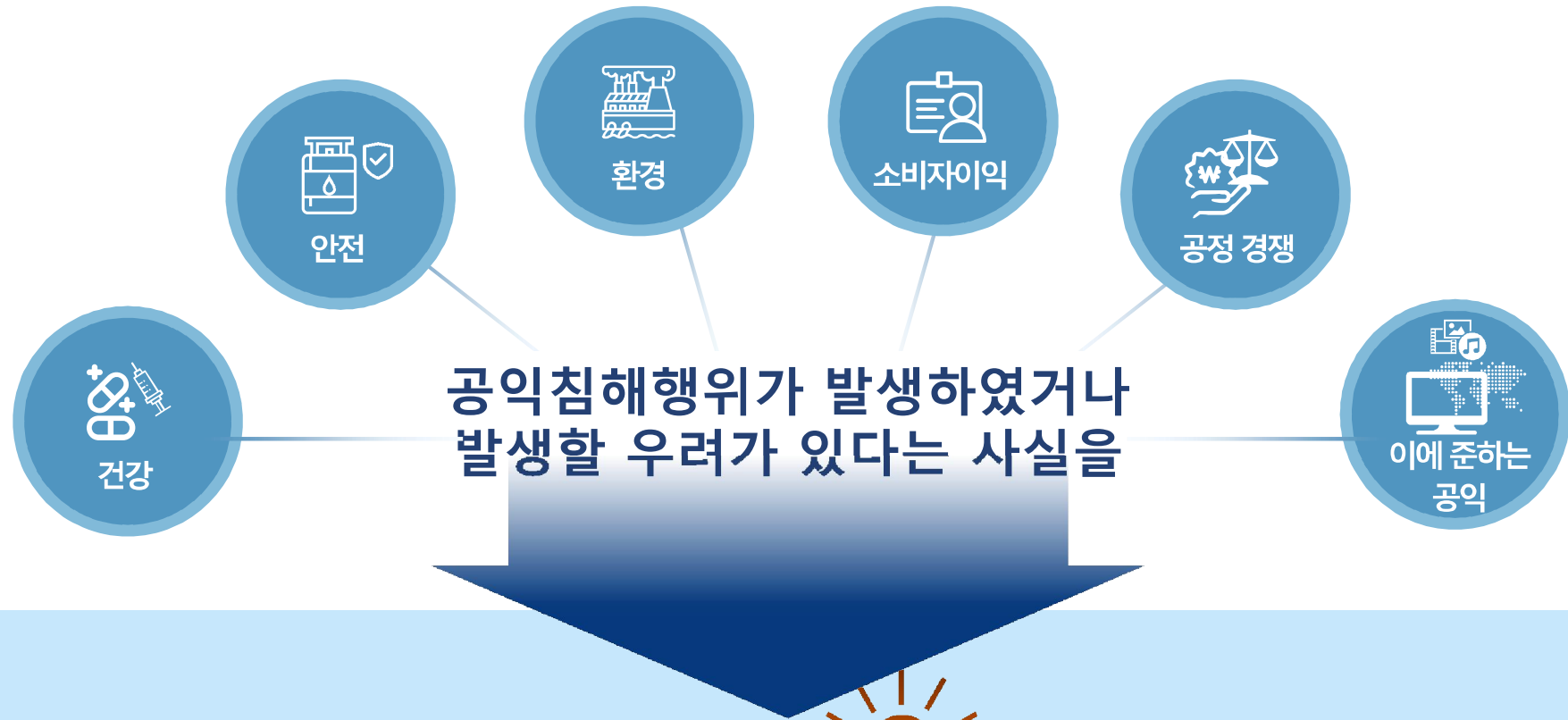


다

가,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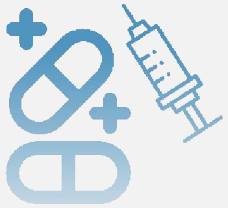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020. 11. 20.부터는 467개 법률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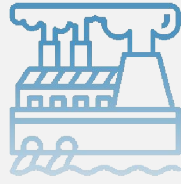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소비자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공정 경쟁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잠시만요! '신고성 민원'은 무엇인가요?

- 신고성 민원 :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공익침해행위** 를 신고한
민원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부패신고, 공익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

주의

- 공익신고 전용창구가 아닌 다른 접수창구를 통해 들어온 신고 중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것도 모두 공익신고에 해당(일반민원과 공익신고의 차이는 형식과 창구가 아닌 신고내용)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부패신고주체, 신고기관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 ✓ **공직자의 부패신고 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

누구든지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 감사원
- ✓ **국회·법원 증언의 경우도 부패행
위 신고로 보아 신고자 보호 가능**

공익신고주체, 신고기관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누구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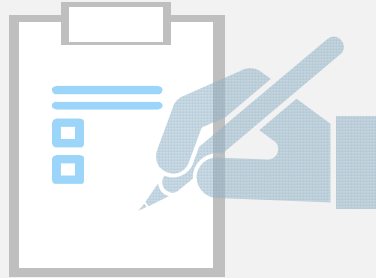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국회의원

❖ 각 신고기관별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운영 필요

부패·공익신고 방법

기명의 문서



-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첨부**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및 FAX(044-200-7972) 로 신고

- 전화(1398)는 상담만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

-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 ✓ 신고의 취지와 내용
- ❖ 신분공개 동의여부 체크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만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신고의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대리가능(신고기관 : 권익위)**
- 변호사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권익위에 제출**
- 권익위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운영

비용
NO!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해
권익위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명)”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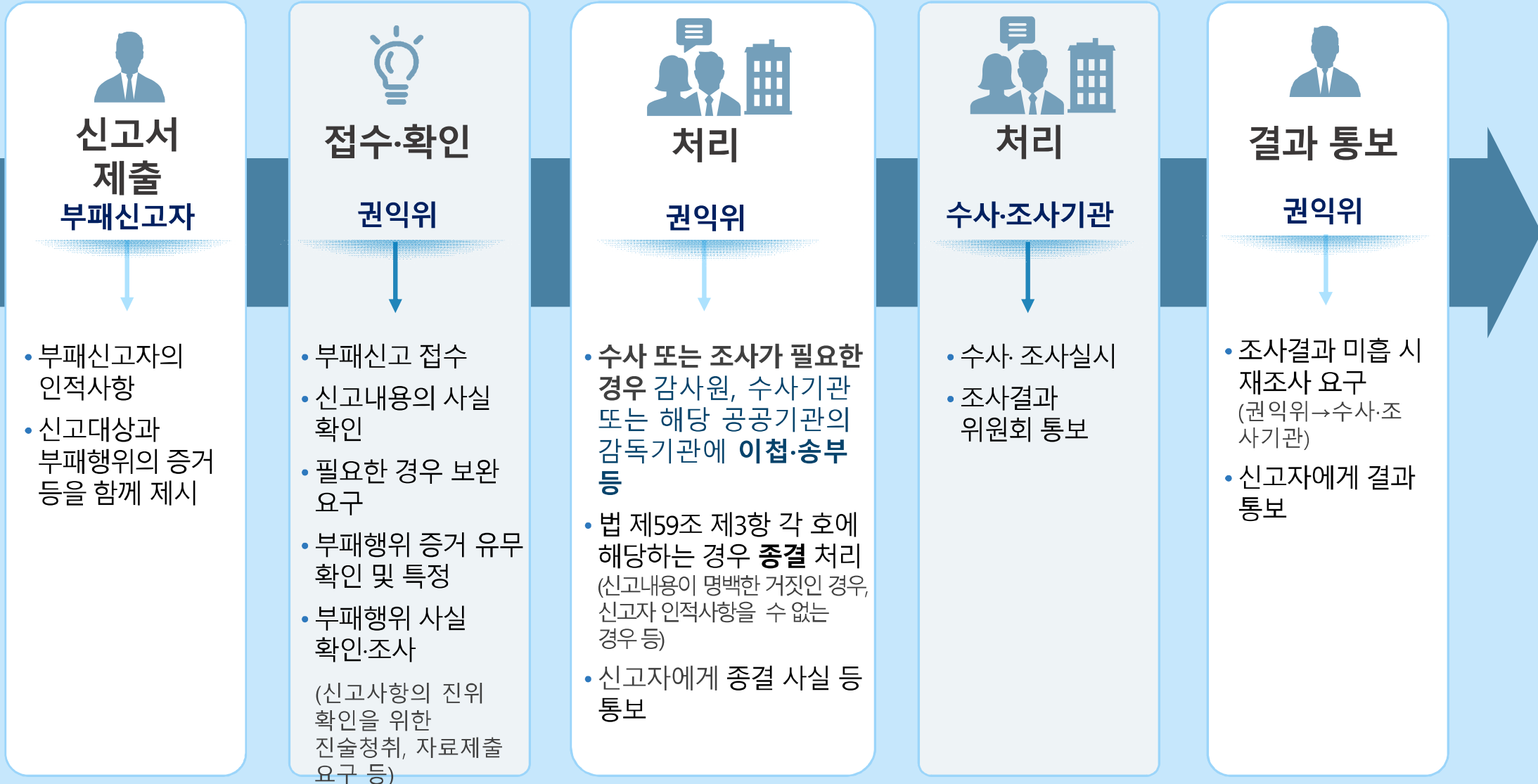
☞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한 상담·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게 수당 지원

내부
공익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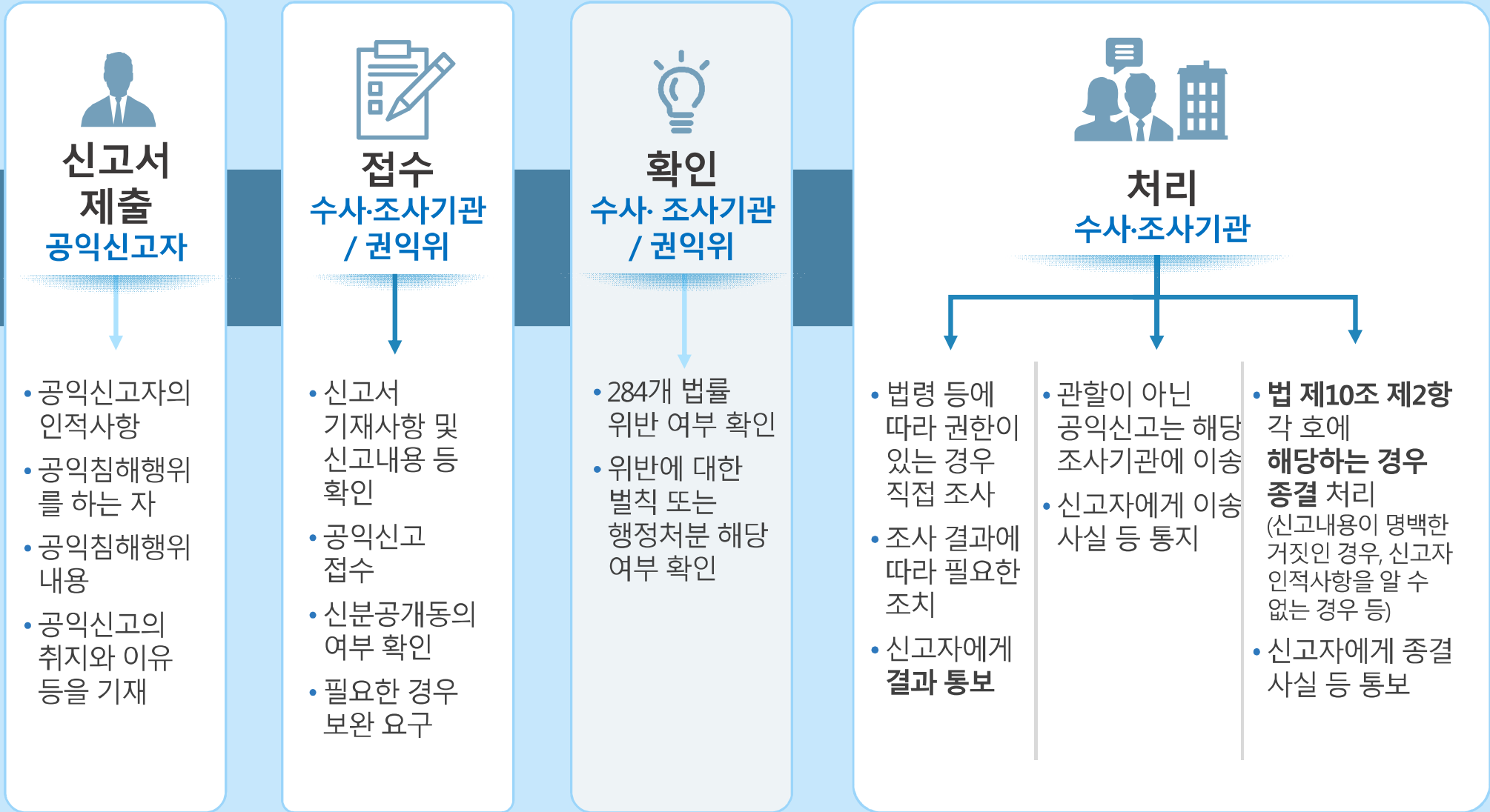
(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의2)

- ①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
- ②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와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
- ③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 **교육·훈련**
- ④ 피신고자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 ⑤ 피신고자(기업, 법인) **계열회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 ⑥ 그 밖에 피신고자의 지도·관리·감독 받는 자로서, 불이익조치 받을 수 있는 자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수사·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 접수·처리 절차

접 수

(수사·조사기관)

- ① 신고서 기재사항, 증거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② 공익신고 접수
- ③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 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확 인

(수사·조사기관)

- ①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처 리

(수사·조사기관)

-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 관할이
아닌 경우 |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해당수사·조사기관에 이송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②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 |

권익위 이첩 · 송부 공익신고 사건 접수 · 처리 절차

처 리 (조사기관)

- 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③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

다른 기관에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와 협의
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후속조치요구 (권익위)

- 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품회수 등)
- ② 재조사 요구(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조 치 (조사기관)

- ① 의견제시,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
- 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

3. 신고사례와 처리 시 유의사항



부패신고 사례/예시 - 공직자 사익도모



제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

A제약회사 대표가 자사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심사·평가 등에 대비하여 관련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전국 일반 병·의료원에도 약품 구매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B대학교 교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사무원을 통해 관리하고, 연구원들에게는 매달 월급 명목으로 몇 십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신고함



민·군 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피신고자는 민·군기술적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속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연구원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하고, 피신고자가 실소유주인 페이퍼 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키거나 사업수행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연구비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신고함

부패신고 사례/예시 -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



지자체의 수문 권양기 설치비 편취

C주식회사 운영자는 수문 권양기 과부하 안전장치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장치를 떼어내 세척한 다음 도색만 하고 다시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함



사립유치원 원장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립유치원 원장 D는 재직기간 중 유치원에 근무 하지 않은 배우자를 행정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배우자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가 퇴사처리하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 일시금과 퇴직수당 명목으로 사학연금 51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



지자체의 휴대폰요금 부당지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동일 목적으로 이중 지급받아 편취함

공익신고 사례/예시 - 건강 분야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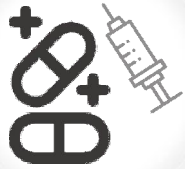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마약류 관리 부실

A요양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접수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사용한다는 신고



프랜차이즈 식당의 식육가공품 불법 소분 판매

식육가공 전문업체인 B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매장 내 조립된 식품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 판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조리되지 않은 식육가공품을 불법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C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신고

공익신고 사례/예시 - 안전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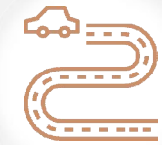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방법 위반

액화염소가스는 허가 받은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지상에 있는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해야 함에도 액화염소가스 저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저장·보관 및 충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



오피스텔 부실시공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속이고,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고 신고



신항 도로공사 부실시공

신항 도로공사 중 D지역 계곡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신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기준 미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신고

공익신고 사례/예시 - 환경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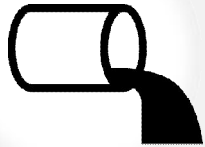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대기오염물질 배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도장공정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내 필터를 규정과 다르게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신고



폐수 무단 방류

피신고자가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



폐기물 불법 매립

건물 인테리어 및 싱크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타일, 나무, 고철 등 각종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일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사업부지내 무단 매립하고 있다고 신고

공익신고 사례/예시 - 소비자이익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공공의 이익



수입산 유채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E업체에서 수입(독일 또는 몽골) 유채씨를 이용해 카놀라유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신고



대형마트의 경품 지급관련 개인정보 과다수집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2만원 상품권 당첨자 200명에게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였다고 신고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위반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교환·반품과 대금 환불 및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신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

가상화폐(가상통화)를 발행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신고

공익신고 사례/예시 - 공정경쟁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위원회가 감리용역 계약의 감리비 수준을 결정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신고



제조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각각 어느 정도 낙찰 받을지 물량을 미리 정한 후, 국내 기계업체들의 구매입찰마다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였다고 신고



하도급 대금 선급금 미지급 의혹

F회사가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인 G회사에게 하도급 대금 선급금 4억 4천 8백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신고

공익신고 사례/예시 - 이에 준하는 공익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전문학원 일자리 알선·소개비 황당한 요구

전문학원으로부터 전공과 관련된 웹디자이너 일자리를 소개받은 후 학원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당한 H군은 학원에서 소개해준 금융브로커를 통해 연리 200%이상의 사채를 쓰고 있음을 신고



공공기관 임원의 민간 용역업체에 대한 채용 요구

공공기관 임원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몇몇 직위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척이 채용되도록 부탁하였고, 용역업체 인사담당자는 내부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친척을 채용한 사실을 신고



기타 사례 예시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

부패·공익신고 처리시 유의사항

비밀보장 준수

- ✓ 신고자나 협조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공개·보도 금지**
 - * 공익신고의 경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 내용(피신고자 인적사항 포함) 공개 금지
-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 /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보호·보상 제도 안내

- ✓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문'** 제공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1)

신고성 민원
숙지 미흡

✓ A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 철도공사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 B공단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은 인권위에 개인정보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음

☞ **신고성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공익신고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 처리**

피신고기관에
신고자 정보
고의 누출

✓ C공무원은 어린이집 관련 **내부 공익신고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누설**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은 제보한 교사를 색출해서 해고하였음

✓ D공무원은 사학비리 제보 내용과 제보자 정보를 해당대학 관계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함**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2)
접수·처리
과정에서
부주의

- ✓ 소청위는 O교사의 승진탈락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E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고, E교육청은 이와 관련 O교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청위에 제공, 소청위측도 민원인 **개인 정보를 지우지 않고 소청 신청인에게 전달함**
- ✓ F공무원은 OO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하던 중 **업무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
- ✓ G공무원은 모래섞인 시멘트 사용 사실을 신고한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내부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자 전화번호를 노출함**
- ✓ H교육청은 예산부적정 사용 관련 소청심사청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보내달라는 학교의 요청에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그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송달됨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3)
수사의뢰

✓ I공무원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함

(유형 4)
소송관련
문서제공

✓ J기관은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제공

✓ K기관은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신고자가 해당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5)
보도자료
및
언론유출

✓ L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OO 원무부장의 신고' 라는 신고자가 유추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남

✓ 주민지원사업비 관련 민원에 대해 M환경청이 OO시의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 문서(민원내용과 민원인 정보 포함)를 OO시에 제공하고 시는 이를 언론기관에 유출함

위반 시 처벌조항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4. 신고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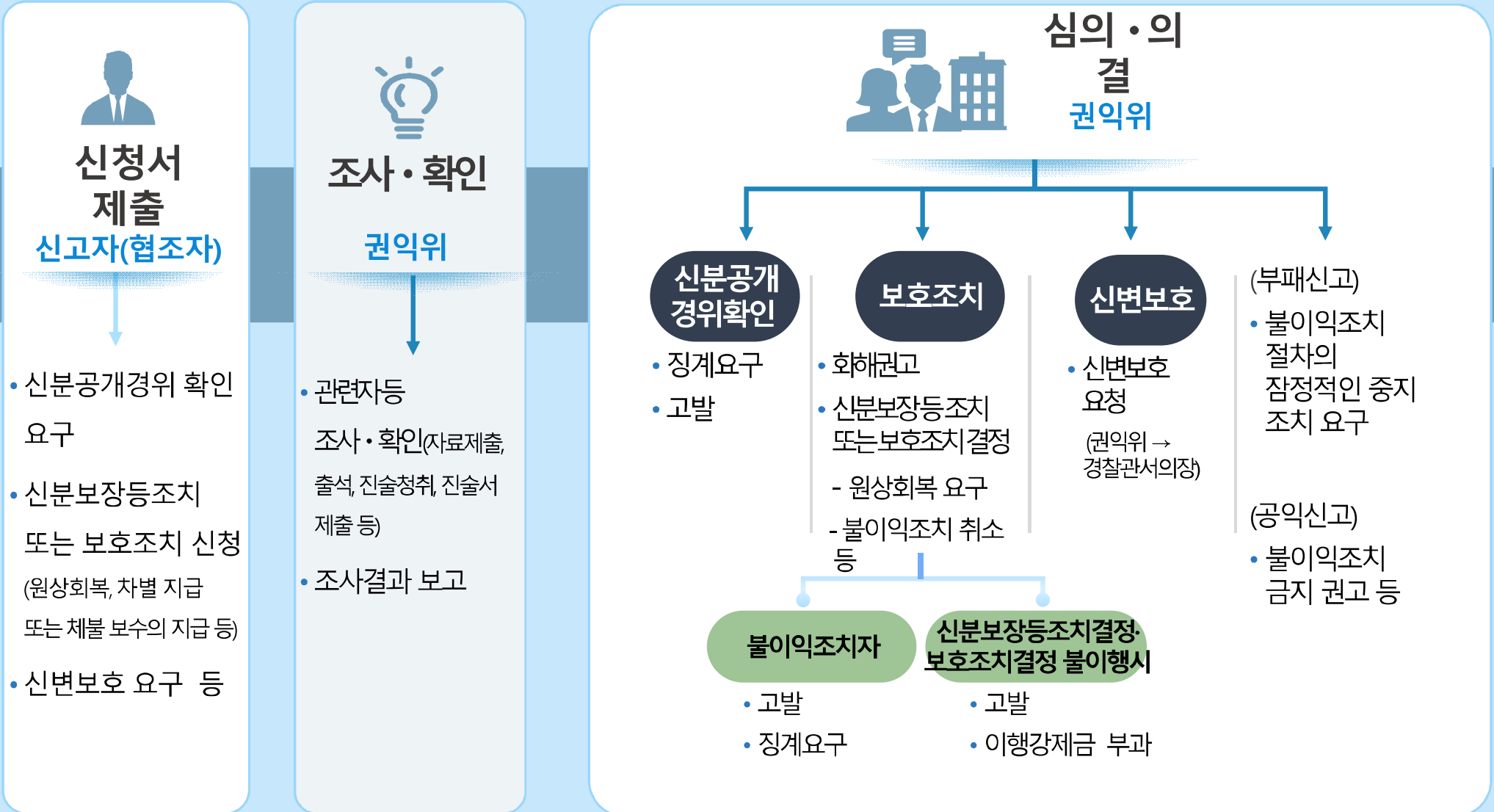


신고자 보호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



보호신청 접수 및 처리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신고의 경우 '20. 6. 11.부터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제재)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부패신고 사례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A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처리하게 하는 등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




부패신고자

A 공사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부패신고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진정서를
공문에 첨부



신고처리 담당자

신고처리 담당자의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



부패신고자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신고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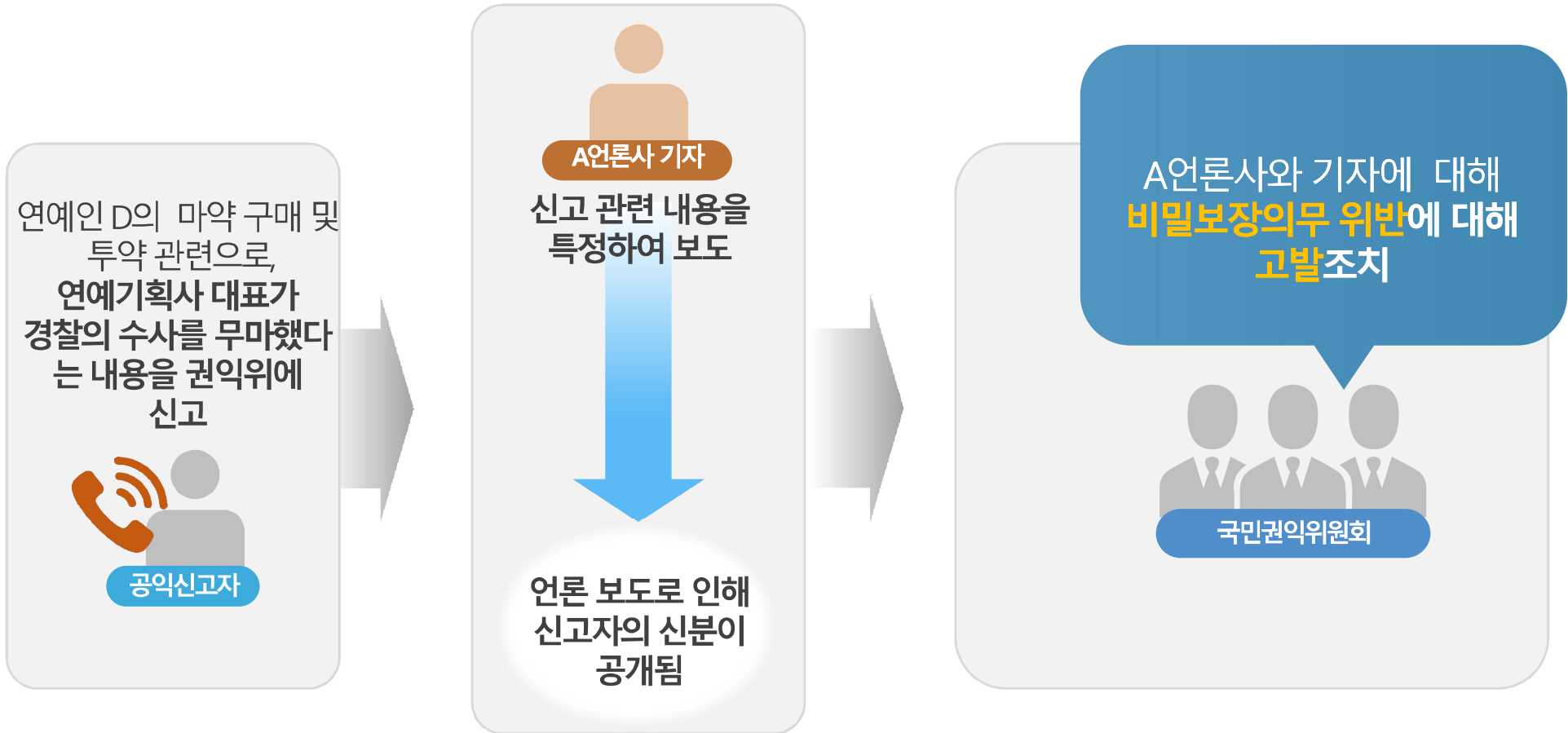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88조]

공익신고 사례

“경찰의 마약수사 은폐 의혹”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 제30조 제1항 제2호]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 **(신고 방해·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항]

-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불이익 조치 유형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해 부패신고자(협조자)를 지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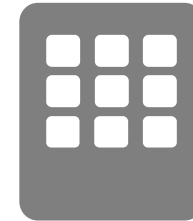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62조의3]

국민권익위원회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 ❖ 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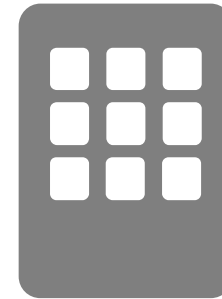
불이익 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부패신고자·협조자에 한함)

'위원회 결정시까지
신고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

국민권익위원회



-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6.11.부

터)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3항]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공익신고자(협조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부패신고 사례 1


“신규직원 채용 시험 점수 조작”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원상회복) 요구

○○ 공사 사장이
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




부패신고자

○○ 공사가 신고자에게
해임처분
↓
신고자는 해임처분 취소
및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부패신고자

○○ 공사 사장에게 원상회복 요구,
구법에 적용에 따른 불이익조치자
에 대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부패신고 사례 2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 요구

B 공사의 행동강령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을 위원회에 신고



부패신고자

당초 근무지에서 다른 사업소로 전보조치
그러나 전보된 곳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짐



부패신고자

근무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전보 등을 해줄 것을 요구



부패신고자

B 공사의 인사권자에게 부패신고자에 대한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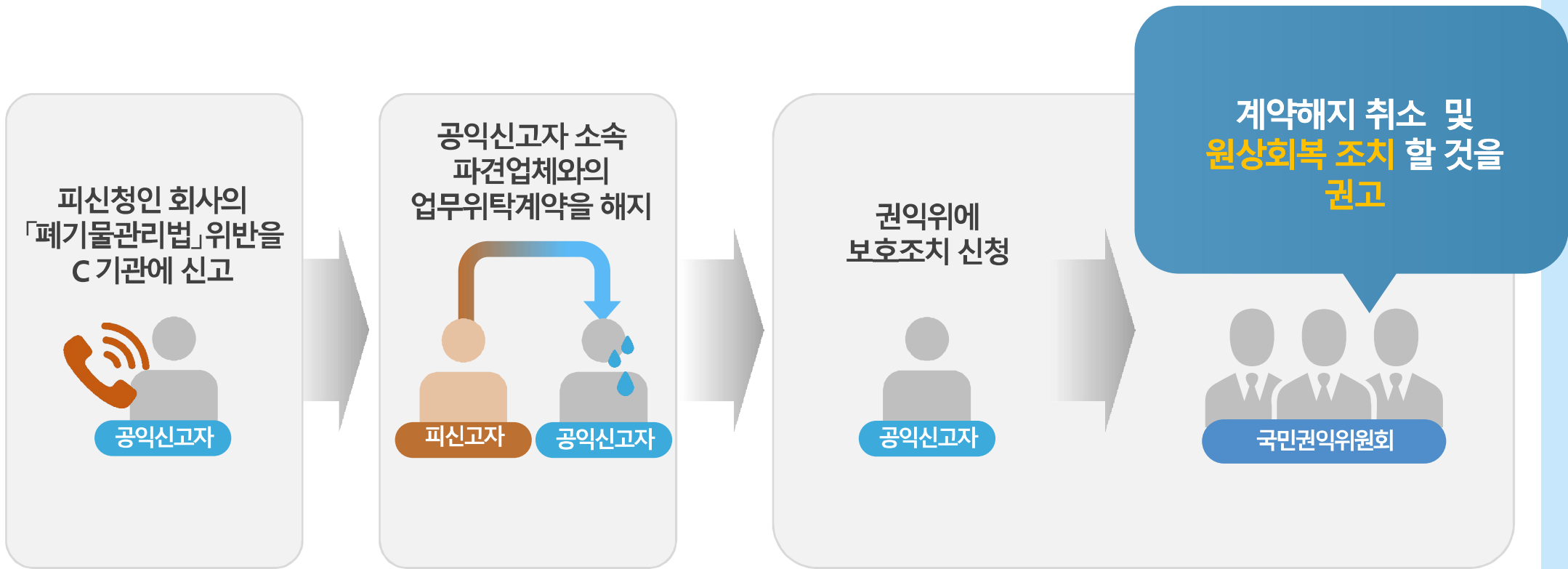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공익신고 사례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2항]

공익신고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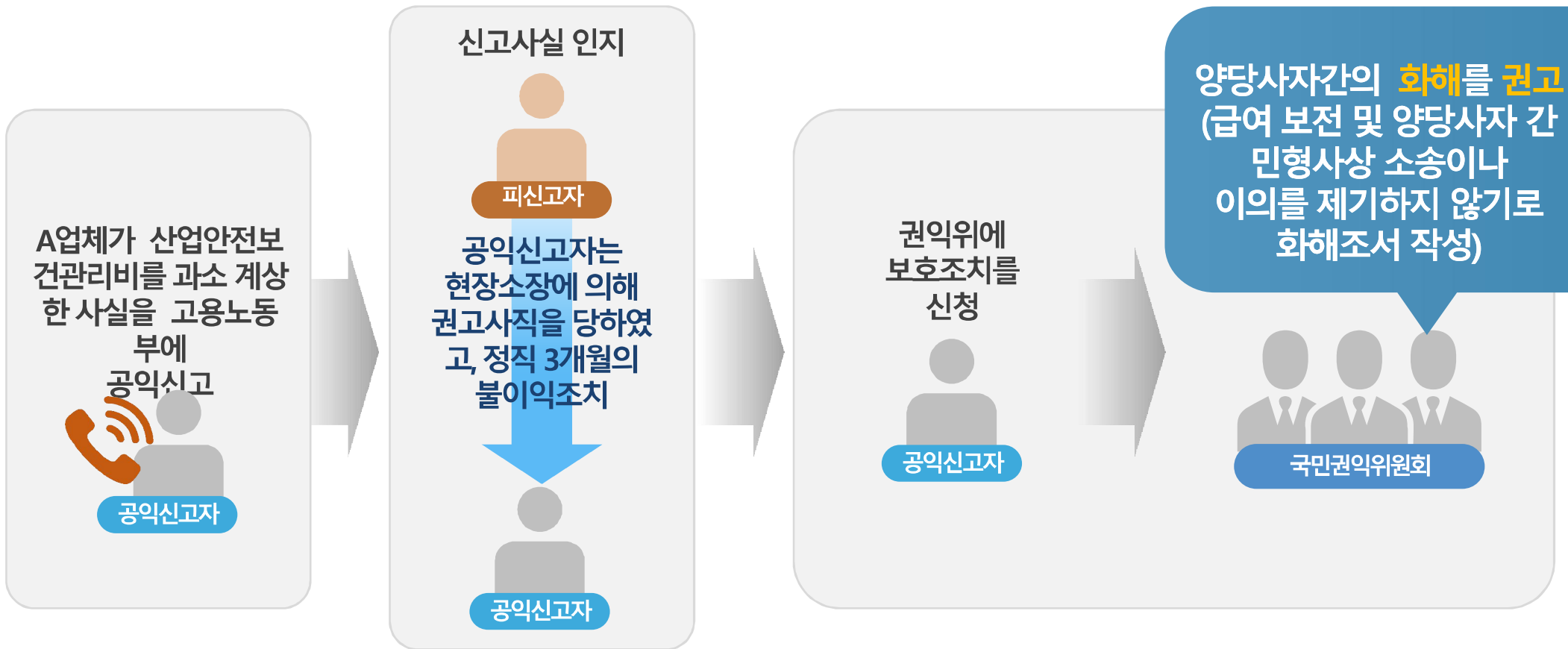
“어린이집 부실 급식 및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공익신고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 신 변 보호요청



➤ 신 변 보호 방 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부패신고 사례

“하수관거공사의 시설물 미시공” 신고 관련 신변보호 요구

C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업체가 설계내역과 달리 시설물의 일부 수량을 미시공한 의혹을 신고



부패신고자



신고한 이후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신변에 불안



부패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요구



부패신고자



부패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요구인의 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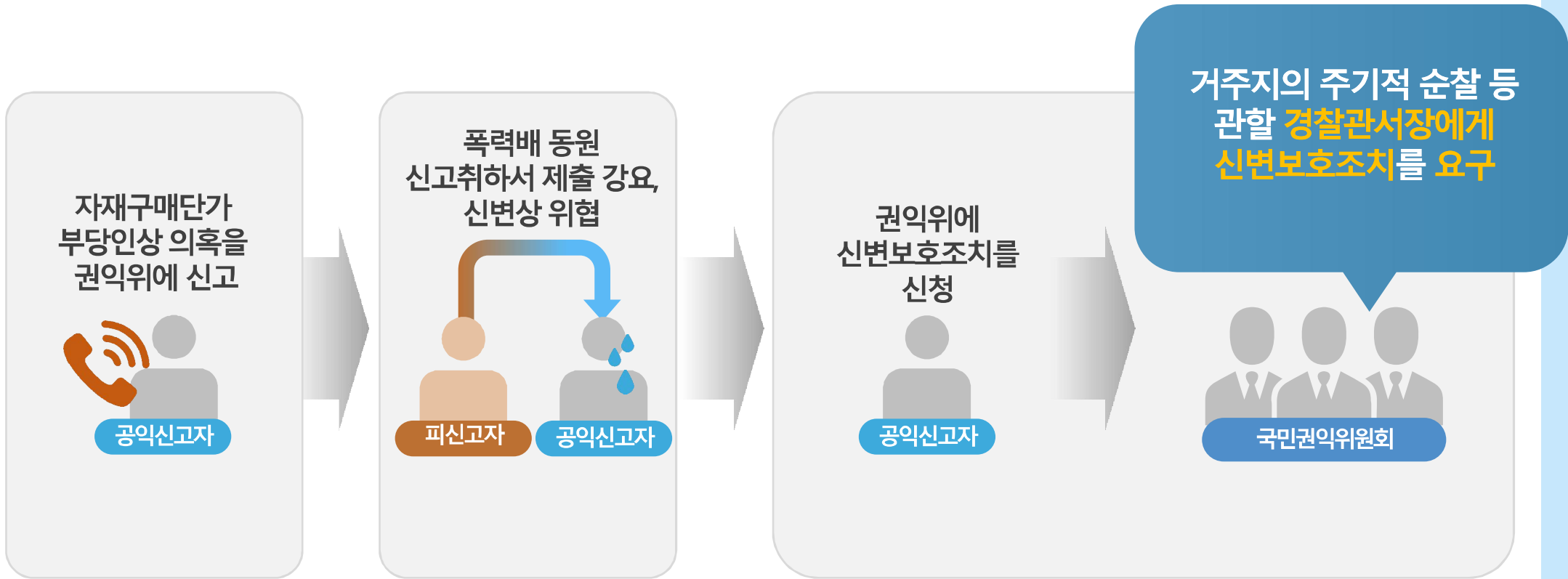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 사례

“자재구매단가 부당인상” 신고 관련 신변보호 요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 **형의 감경·면제**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부패·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부패신고 사례

“지도·감독기관에 부패행위” 신고 관련 책임감면

소속단체의
지도·감독기관에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부패신고자

부패신고로
신고자의 범죄 발견
1심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선고



부패신고자

책임감면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으로 감형



법원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 사례 1

“노인학대”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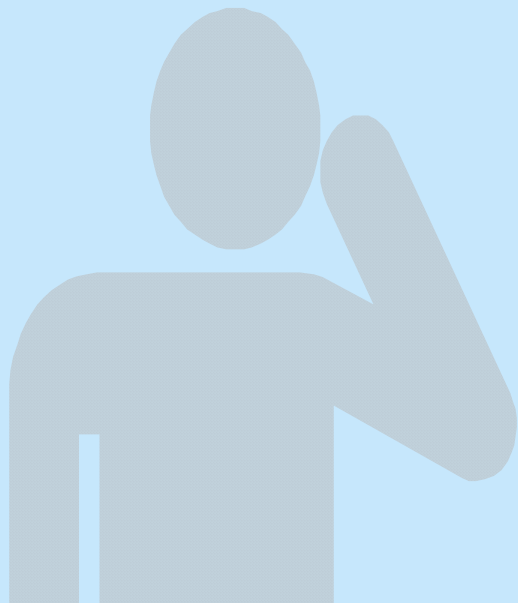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 사례 2 “입찰 담합행위”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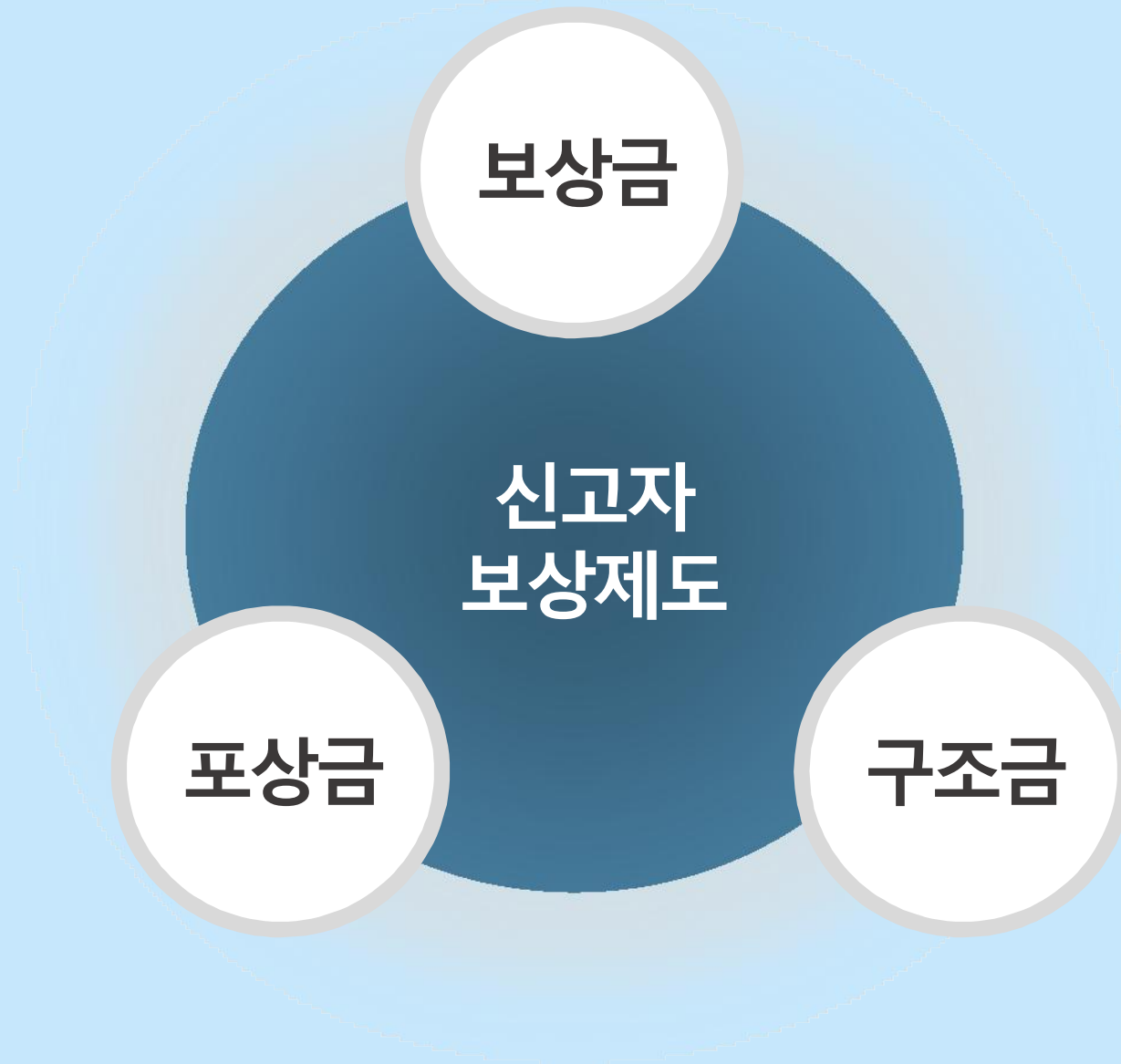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금

개념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

보상금 대상

- (부패신고) 권익위 신고자
 -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공익신고) 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추징금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통고처분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 벌칙, 통고 처분,
-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영 제21조]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



보상금 지급신청 신고자

[제출서류]

- 보상금 신청서
- 부패신고자 또는 내부공익신고자 입증자료
- 신고처리결과(공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조사·확인 권익위

- 부패공익신고 처리 행정기관 등에 자료 요청 및 제출
-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조사 확인



심의·의결 권익위

-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 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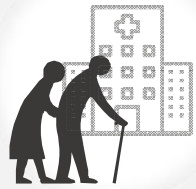
- ✓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보과 결정통지서 송부
- ✓ 보상금 계좌입금



상환 요청 공공기관 / 지자체

-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 보상금 상환요청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사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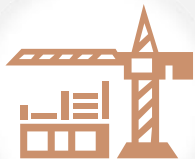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A병원 대표 등이 사무장병원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허위로 치료를 한 것처럼 신청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80억 4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2억 306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지열난방공사 참여 시공업체 대표들이 무자격 시공업체 대표들에게 지열난방공사 시공권을 불법 양도 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사 계약서 등을 B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5억 123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4,828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량건축자재 납품

C납품업체 대표가 KS규격에 미달되는 철선으로 바닥구조체를 제조하여 ○○청 D공사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2억 2,405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3,736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례/예시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건 보상금지급

신고내용

피신고업체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
관할 기관에 신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



1,165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 건 보상금지급

신고내용

폐기물 매립
관할 환경청에 신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



8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건 보상금지급

신고내용

제약사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관할 검찰청에 신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



9,60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 포상금

개념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포상금 지급대상

- (부패신고)
: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신고자
- (공익신고)
: 위원회 또는 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신고자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
·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발굴 기관/권익위

1. 기관 추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상시/정기)

[제출서류]

- ✓ 추천기관의 공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및 그 밖에 참고자료

[추천방법]

- ✓ 반드시 추천기관의 공문으로 추천

2. 위원회 직권 선정



조사 확인

권익위

- 추천자료 검토 및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조사·확인



심회의결

권익위

-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회의결



포상금 지급 신고자

-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 송부
- 포상금 계좌 입금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사례/예시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도 소속 공무원이 E재단의 공사입찰 발주과정에서 낙찰자 선정에 당초 입찰 제안서 평가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던 평가기준을 임의로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유사사례 예방 등이 인정되어 **25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장병물품 납품비리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위탁물품 신규품목 선정에 참여하였던 F회사 등 65개 군납업체들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국군복지단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2,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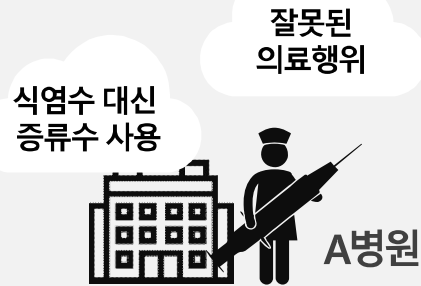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G고등학교 교감과 교장이 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준 보조금에서 교사 멘토링 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기초 영문법 수업을 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청구하여 편취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사례/예시

의료법 위반 신고 건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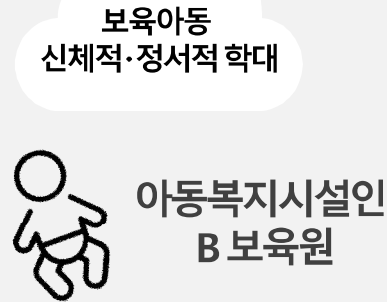
특별감사 결과 증류수 오용 및 사건 은폐사실이 확인,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아동 학대행위 건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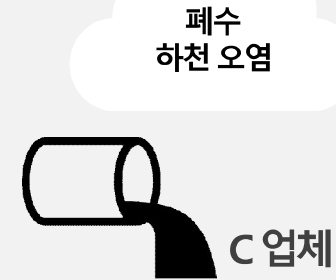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6월 ~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이 부과



1,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폐수 무단 방류 건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결과

피신고업체에 조업정지



37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 구조금

개념



구조금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부패신고자 구조금 지급제도는 '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긴급구조금

-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권익위 심의·의결 이전에 우선 지급 가능(공익신고만 해당)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구조금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제출서류]

- 구조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 수급자 증명서
(긴급구조금에 한함)
- 그 밖에 참고 자료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



조사 확인 권익위

- 신청인등에 대한 조사
(부패·공익신고등과
신청인이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지출한
비용의 종류 및 규모 등)
- 구조대상가액 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
등 확인
(행정기관 등에 구조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심의의결 권익위

-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 심의의결



구조금 지급 신고자

-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보'와
'결정통지서' 송부
- 구조금 계좌 입금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례/예시

불량 전분 제조·유통 신고 건 구조금 지급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곱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재료를 사용해 소맥전분을 제조, 유통하고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 후 신분노출되어 권유에 의해 퇴사,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결과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실직상태부터 재취업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1,393만원 구조금 지급 결정

작업장 안전조치 소홀 신고 건 구조금 지급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근로자 작업 시 추락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A 기관에 신고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 후 해고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 그에 소요된 비용을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결과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노무사 선임 비용에 대해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88만원 구조금 지급

입찰비리 신고 건 구조금 지급

신고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전시·행사 등의 용역 입찰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적 노무를 강요하였음을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신고

구조금 신청

신고 후 강제 전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결과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진료비에 대해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50만원 구조금 지급

'20년도 권익위 신고자 보호정책 추진 사항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및 비밀보장 강화

- ✓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284개 → 467개로 확대, '20.11.20. 시행)를 통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 ✓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공개 시 제재 추진(법 개정사항)
- ✓ **부패신고자도**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추진(법 개정사항)

책임감면 확대

- ✓ 권익위 요구가 없더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감면근거 마련 추진(법 개정사항)
- ✓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추진(법 개정사항)

긴급구조금 제도

- ✓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권익위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 도입 추진(법 개정사항)

보상 등 지원제도 강화

- ✓ 부패신고자 보상금 정률제(30%) 도입, 상한액(현행 30억)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사항)
-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정률제(30%) 도입, 상한액(현행 30억)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사항)

영화 '제보자'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

“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위험에 빠지는 일로
부패가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부패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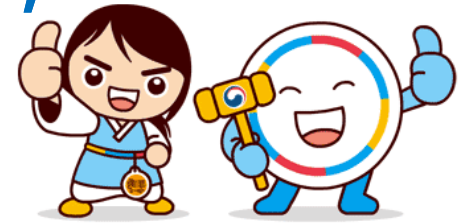
- 홍콩 '엄정공서(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의 임무 중

지식인의 책무

“ 내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습
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배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배신이 아니까
어찌 보면 지식인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재승의 '과학의 눈으로 본 배신의 정체성' 중, 한겨레출판 <배신> 2008년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